



주간 통일정세

2009-2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가극 관람, 당간부 대거 동행(6/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 고위간부들을 대거 동행하고 함흥대극장에서 가극 ‘홍루몽’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김 위원장은 피바다가극단에서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제작한 ‘홍루몽’을 관람한 뒤 공연내용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우리의 문학예술을 끊임 없이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 특히 이날 공연관람에는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을 비롯해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최익규 선전선동부장, 박남기 당 부장, 김양건 통일선전부장 등 노동당 고위간부들이 동행, 또 이날 관람에는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도 동행

● 김정운, 北국방위원장 대행 집무(6/20, 마이니치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3남 정운씨가 국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행’으로 집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0일 보도, 신문은 북한 지도부와 가까운 복수의 관계자가 증언했다고 보도, 신문에 따르면 ‘위원장 대행’은 정식 직책이 아니지만, 북한 내 최고 지위인 국방위원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보여 정운씨가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혔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
- 마이니치는 북한군 중추기관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올해 초 정운씨가 후계자로 선출됐다는 내부 통지를 보낸 바 있다며 그 후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중심으로 후계 체제 정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 또 인민무력성과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김정운 영도체계의 아래”라는 용어가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5월 25일 이후에는 복수의 재외 공관에 후계자 결정 전문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짐.
- 이달 초순에는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전국 당 조직에 정운씨의 후계 내정을 전달했으며 당시 “지금은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가주석의 후계로 결정될 당시와는)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후계자가 누군가에 대해 숨길 필요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말씀’도 첨부됐다고 마이니치는 전언



- 북한 지도부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정운씨는 명확히 장군님(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후계지명을 받은 것 같다”며 “정운씨는 당에도 인민무력부에도 적이 없고, 국방위원장 대행·대리의 입장으로 전념하고 있다. 장군님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대로 위원장에 취임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

● **北주재 외교관, 김정일 건강 악화(6/18, 환구시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최근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평양시내는 별다른 이상없이 평온하다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8일 북한주재 한 국가 대사의 말을 인용,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이 대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크게 악화돼 국내 정세가 복잡해졌고 김 위원장은 이 때문에 3남인 김정운을 일찌감치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이 외교관은 이어 평양은 16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규탄하는 10만 군중집회를 개최한 후 평온을 되찾았다고 전언, 평양 거리는 안전하고 계엄의 조짐도 없으며 시민들은 출입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 외교관은 소개
- 북한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에 찬성한 것은 어쩔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을 크게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중국을 친구로 여기고 있다고 이 대사는 소개

● **北, 주중대사관에 정운 후계 시사 전문 발송(6/18, 도쿄신문)**

- 북한이 5월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3남 정운씨를 내정하고 후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전문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보낸 것이 확인됐다'고 도쿄(東京)신문이 북한 관계자 및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전문 내용은 5월 30일 베이징 주재 최진수(崔鎭洙) 북한대사가 관원들에게 전달

● **김정일 딸도 베른서 유학(6/16, 마이니치신문)**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딸이 1990년대 후반부터 스위스 베른의 공립 초등학교에 유학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6일 보도, 신문은 딸의 이름이 예정(イェジョン)이라고 전하면서 딸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는 영순(英順)이라는 설도 있으며, 김 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藤本建二)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여정(ヨジョン)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 예정씨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중인 2000년말께 학교를 그만두고 귀국했음을 언급
- 예정씨는 차남 정철, 삼남 정운씨와 마찬가지로 고영희씨가 생모이며, 1987년에 태어났으며, 후지모토씨는 김정일 위원장의 딸이 9월 26일에 태어났다고 밝혔다.



나. 정치 관련

● 北, 확장억지력은 핵전쟁론 비난(6/20, 통일신보)

- 통일신보 20일 ‘외세 공조로 동족을 해치려는 무모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통한 안보공약’에 대해 “뒤집어 놓은 핵전쟁론”이라고 비난
- 신문은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방문, “미국의 현 당국자를 비롯하여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고위 인물들을 만나 그 무슨 ‘핵문제에서의 공조’니,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통한 안보공약’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 댔다”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제공론은 뒤집어 놓은 ‘핵전쟁론’”이라고 주장
- 신문은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언급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오직 외세를 등에 업고 핵전쟁을 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승공통일’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야망만이 가득차 있다”고 남한 정부를 비난

● 北, 핵실험으로 우리민족끼리 통일 담보(6/20, 통일신보)

- 북한은 2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실시한 결과 “조선민족의 힘은 열백배로 더욱 강해졌으며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통일신보가 주장
- 신문은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전후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6.15선언에 대해 “망각 속에 사라진 합의”라고 말하는 등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이 6.15선언을 폄하한 것을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염원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행위”라고 비난, 또 “북남공동선언을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 강화 조치와 억지로 연결시켜 시비중상하고 있는 것”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핵실험은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력갱생의 산물”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전고투하면서 기어이 해낸 것”이라고 주장

● 北, 제재에 눈썹하나 까딱 안해(6/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조선 사람의 본때’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우리에 대하여 제재와 봉쇄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고 벽적 고아대는 적대 세력들이 어리석고 가소롭다”며 “자립의 토대 위에서 제 땅의 것을 가지고 제 힘으로 살아나가는 인민이 눈썹 하나 까딱할 것 같은가”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설명도 권고도 논리도 통하지 않는 제국주의 강도배들에게 충대가 말을 하게 해야 한다고 우리 군대가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 어떤 적당한 담보나 보잘 것없는 양보따위나 받아내자



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희생도 무릅쓰며 무적의 국방력을 다져 온 것이 아니다”고 소개

● **김영남, 우리 혁명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6/18,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사업 시작’ 45주년을 맞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창창한 미래가 펼쳐진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상임위원장은 “오늘 우리 혁명은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고 머지 않아 조국땅에는 김정일 시대의 강성대국 기념비가 높이 솟아 오를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모시고 혁명의 수뇌부 두리(주위)에 굳게 일심단결”하자고 호소
- 또 “무적의 군력에 의거해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강화하며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준비”시키는 동시에 “국방공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 보고대회에는 오극렬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전병호 김기남 최태복 김중린 당비서, 김영일 총리, 로두철 부총리,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겸 국방위원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으나, 현재 중국을 비공식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음.

● **대북제재 반대 평양시 10만 군중대회 개최(6/1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1874호)을 규탄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6일 보도
- 인민무력부 박재경 부부장은 이 대회에서 “우리 인민군은 그것(안보리 제재)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 그는 “우리 손에 쥔 핵무기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방어 수단인 동시에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는 공격 수단”이라고 강조
-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의 전량을 무기화하며 우라늄 농축 작업을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과학원 박길남 실장도 “우리 과학자들은 외무



성 성명대로 우리나라 농축 작엽에 본격 착수하는 것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할 것”이라고 주장

● 北통신 美 화폐위조설, 공여지책(6/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가소로운 공여지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 최근 북한의 위조화폐 제작·유통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이 통하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의 반영”이라고 비난
- 통신은 “우리가 평화적 위성발사에 성공하고 저들의 오만부당한 적대행위에 초강경 대응하자 미 행정부가 황황히 화폐위조설을 꺼내 든 것은 우리를 모독하고 압력을 가해 굽어들게 해보려는 것으로서 세계에 대한 파렴치한 기만”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美지원 식량 감시없이 임의 배분(6/2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에서 식량배분 활동을 중단하면서 남겨둔 미국 정부의 지원식량 2만2천t을 북한 당국이 멋대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익명의 미 국무부 관리는 “미국의 비정부단체들이 북한 당국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지난 3월말 북한에서 모두 철수한 후, 이 단체들이 배분을 끝내지 못한 식량 2만2천t을 북한 당국이 예정된 수혜자들에게 배분했다고 통보해왔다”며 “구호요원의 감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합의사항대로 배분했다는 북한측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를 표시

● 美·유엔, 대북 제재에도 인도지원은 계속(6/20, 미국의소리방송;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주도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섰으나 미국과 유엔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은 지속될 전망, 유엔개발계획(UNDP)의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2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대북 지원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북한내 7개 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의 농업분야로 제한돼 있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1명의 UNDP 국제요원이 평양 임시사무소에서 정식사무소 개설을 준비중이나 UNDP의 대북 지원사업이 완전하게 재개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또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가 미국의 민간단체들과 손잡고 벌여오던 대북 의료지원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 국무부 관리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북



한주민의 복지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4개 민간단체는 400만달러를 들여 북한 병원에 전력과 의료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그는 “미국 정부는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북한 의료환경의 변화를 추구한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은 미국과 북한간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라고 설명

● WFP, 北에 아사자 발생 우려(6/19, 자유아시아방송)

- WFP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아사자 발생에 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식량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숨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 그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 주민 사이에서 미국의 식량지원에 관한 대화와 질문이 많이 오간다”며 “미국의 식량지원이 중단된 이유를 묻거나, 언제 재개되느냐는 등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소개
- 리슬리 대변인은 “현재 북한주민 150만명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2kg의 쌀과 1kg의 곡물을 지원하지만 요즘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겨 이의 절반이나 4분의 1밖에 공급할 수 없다”고 설명, “지난해 추수한 식량이 다 떨어지고 지난 몇달 동안 외부 지원도 끊겨 북한주민의 식량사정은 매우 열악하다”며 “다음 추수때까지가 걱정”이라고 소개
- 이와 관련, 미 국무부 커트 통 한국과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미국의 식량지원이 중단된 상태지만 지원 재개를 논의할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정치적 사안과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힘.

● 北, 국제 보험 사기로 현금 조달(6/18, 워싱턴 포스트 지)

-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인 보험사기를 통해 상당액의 필요한 현금을 조달해왔다고 워싱턴 포스트 지가 18일 보도
- 북한은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사고나 공장화재, 홍수피해 및 기타 자연재해 등을 내세워 외국 유명 재보험회사들로부터 수억달러를 받아냈으며 이에 따라 국제 보험시장에서 북한에 대한 재보험이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포스트지는 소개
- 북한의 ‘세련된’ 보험사기는 주로 조선국영보험공사를 거쳐 재보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포스트 지는 보험공사의 간부를 지낸 김광진 씨의 말을 인용해 지난 2003년 2월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아 낸 2천만 달러가 싱가포르로부터 베이징을 거쳐 평양의 지도자 김정일에게 직접 보내졌다고 보도



- 2008년 독일의 알리안츠와 영국의 로이드를 비롯한 일부 재보험사들이 북한이 주장한 2005년 헬리콥터 추락사고 보상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험 사기의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 보험사들은 추락사고가 연출됐으며 이에대한 북한 법원의 결정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런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북한 측과 합의. 보험사들은 북한에 대한 사기 주장을 철회하고 북한이 요구한 금액의 95%를 지불기로 합의해 사실상 북한측이 승리

라. 군사 관련

● 北 경비정, 동해NLL 접근하다 퇴각(6/18, 연합)

- 북한 경비정 1척이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30분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방송과 대응기동으로 퇴각했다고 합참이 18일 발표, NLL북방 장전항에서 출항한 북한 경비정은 NLL 북쪽 1.8km 해상까지 접근했고 우리 해군 고속정이 즉각 출동해 북상토록 경고방송하자 곧바로 북쪽으로 되돌아갔음.

● 美 항공우주정보센터, 대포동2호 수출가능성 전망(6/18, 연합)

- 미국 국방부 산하 국립우주항공정보센터(NASIC)는 최근 업데이트한 ‘탄도·크루즈미사일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대포동 2호 미사일 개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능력을 보유하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언급
- 보고서는 지난 4월 대포동 2호 발사가 비록 실패했지만 2006년 발사 때보다는 더 완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대포동 2호가 ICBM으로 개발될 경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고체추진체를 사용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
-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파키스탄을 포함한 국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했으며, 중거리미사일도 다른 국가에 수출될 수 있다고 예상

● 北 3년내 장거리미사일 기술적 결함 극복(6/17, LA타임스)

-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군 합참 부의장이 미국이 최소 3년 내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
-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카트라이트 의장은 16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앞으로 3~5년 사이에 기술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미국의 태평양 연안(West Coast)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그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탄두 개발에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발언이 단



지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강조

● **北 미사일공장-발사기지간 빈 열차만 왕래(6/17, 연합)**

- 북한 평양의 산음동 병기연기소 인근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텅 빈 채로 평북 동창리 기지와 함북 무수단리 기지를 각각 왕래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정보당국이 그 의도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당국의 한 소식통은 17일 “평양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동창리 기지와 무수단리 기지를 각각 왕래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화물열차에서는 아무 것도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힘. 특히 북한이 지난 5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창리 기지로 이송한 이후 동창리나 무수단리 어디에서도 미사일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소개

● **北 ICBM 2발 발사 준비 진행(6/17, 산케이 신문)**

- 북한이 북서부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와 북동부인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 2발은 모두 대포동 2호 또는 그 개량형으로 보이며 동시에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 **北, 미얀마에 ‘땅굴 기술’ 수출 의심(6/9, 예일글로벌)**

- 북한이 미얀마 군부에 ‘땅굴 기술’을 수출했고,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도 간접적으로 관련 기술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 미얀마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스웨덴 출신 버틸 린트너 기사는 지난 9일 예일대 세계화연구센터의 온라인 저널 ‘예일글로벌’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기술자들은 나라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미얀마 군부를 위해 현지 지하시설 건설에 도움을 줬다”고 밝힘.

● **北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능 미검출(6/15, 연합)**

-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입증할 방사능 물질이 아직 검출되지 않아 지하 핵실험장의 밀봉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북한이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단행한 2차 핵실험을 입증할 단서인 방사능 물질이 아직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풍계리에 건설된 지하 핵실험장의 밀봉상태가 상당히 견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당국자는 “현재 방사능 물질인 크립톤과 제논을 검출하기 위한 우리의 과학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



외국어, 예술계 등 각 분야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 “평양제1중학교 졸업생들은 전공 분야 외에도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고 중국어나 러시아어 등 제2외국어에도 능통하며 농구나 수영 등 체육 실력도 뛰어나다”고 설명

- 평양제1중학교는 김정일 위원장의 교육 방침에 따라 지난 1984년 9월에 설립된 북한 최고의 수재 양성 기관으로 교육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 때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는다”면서 “국가시험 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해외유학도 갈 수 있다”고 설명, “평양제1중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간부로 선발되며 대학 교수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교육을 받는다”면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분야별로 요직에 채용된다”고 소개
- *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 보통강 강변에 위치한 평양제1중학교는 2만8천㎡ 부지 위에 4층짜리 소학교 건물, 10층짜리 중학교 건물과 함께 기숙사,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학교, 전국 도와 시의 수재들이 다니는 제1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예비고사를 통과해야 평양제1중학교에서 본고사를 볼 수 있으며, 여기서 합격해야 평양제1중학교 4학년에 입학할 수 있음. 평양에 거주하는 당이나 군의 고위층 자제들에 대해서는 평양제1중학교에 특례입학을 시킬 수 있으며 현재 재학생은 1천명 정도임.

- **美대북선교단체, 올해 지하교회 30개 설립(6/19,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의 대북 기독교 선교단체인 ‘318 파트너스’는 올해 안에 북한에 30개의 지하교회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이 단체의 스티브 김 대표는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중국을 방문하는 합법적인 방문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 훈련과정을 거친 뒤 북한으로 보내 지하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언급
- **北, 44년만의 월드컵 본선 진출(6/18,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TV는 18일 새벽 북한 축구대표팀이 44년만에 2번째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된 월드컵 지역예선 마지막 경기인 사우디아라비아 전을 18일 저녁 8시47분부터 약 1시간25분 정도 녹화로 중계방송, 90분 간의 열전 끝에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자 북한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얼마나 미더운 우리의 축구선수들입니까”, “우리 선수들에게 조국이 보내는 열렬한 박수를 보내줍시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함.
 - 중앙TV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녹화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경기에 앞서서 남조선팀과 이란팀 간의 경기가 1대1로 비겼다”고 소개한 뒤 “만일 이번 경기에서 비겨도 우리는 2등으로 본선에 진출한다”



면서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기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

-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날 “우리나라(북한) 축구선수들이 국제축구연맹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했다”며 “미더운 남자축구선수들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경기 성과는 온 나라를 기쁨으로 설레게 하고 있다”고 보도

● 北사회과학원, 30년 작업 한자말대사전 완성(6/18,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29년간의 작업 끝에 전 10권으로 된 한자말대사전을 편찬했다고 조선신보가 18일 소개, 사전에는 북한 주민의 언어생활과 민족 고전에서 많이 쓰였거나 쓰이고 있는 한자와 한자어들이 수록됐으며, 수백 종의 북한 내외 고전문헌과 각종 사전, 자전에서 뽑아낸 한자의 올림자는 2만4천263자, 한자 어휘의 올림말은 28만4천300개에 이릅니다.
- 이에 대해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북한은 나름대로 고전 분야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한자말대사전 편찬은 고문헌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

● 北촬영소, 새 아동영화 제작(6/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가 최근 아동영화 3편을 새로 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들려준 옛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었다는 ‘작은 산삼과 큰 산삼’은 “나이에 맞게 자식에게 산삼을 먹인 김 침지와 욕심스럽게 큰 산삼을 자식에게 먹여 구실 못하게 만든 박 주사의 행동”을 담은 작품이라고 통신은 소개
- 인형영화 ‘빨간 별’ 제4부 ‘고운 마음’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친구를 놀리는 아이와 친구의 부족한 점을 고쳐주는 아이를 통해 “항상 동무(친구)를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으며, ‘날개를 단 개미’는 개미가 산골짜기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독거미들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아는 것이 힘이고 그래야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제를 다룸.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재제 관련

● 유엔, 제재명단에 北기업 추가 검토(6/20, 연합뉴스)

- 유엔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기업들을 추가로 제재명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바키 일킨 유엔주재 터키 대사는 19일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북한 기업과 관련 인물들의 명단을 이미 제출받았다고 언급 - 그는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목록이 좀 있고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어떤 나라가 이 명단을 제출했는지는 밝히지 않음.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미국과 일본, 영국이 이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언, 일킨 대사는 다음 주 말께 제재위원회가 다시 소집될 것이라고 밝힘.

● EU, 對北제재, 조속히 시행 촉구(6/19, 연합)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성토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對) 북한 제재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로 결의, 19일 EU 소식통들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채택할 ‘의장국 결론’에 동북아시아 정세에 불안 요소를 야기하는 북한을 겨냥해 메시지를 담은 예정
- 소식통들은 의장국 결론 초안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 나아가 국제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고 전언
- 의장국 결론 초안은 이와 함께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선주의 동의 아래 공해에서 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최근의 유엔 대북 제재를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나. 북·미 관계

● 美합정, 北강남호 수송차단 준비(6/19, 폭스뉴스)

- 미국 해군 함정이 미사일과 핵관련 물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북한 선박 ‘강남’ 호의 수송을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19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강남호가 중국 연안을 벗어나는 즉시 미 해군 구축함 ‘존 매케인’호가 향해 수송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보도, 하지만 차단 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 한편 현재 강남호는 중국 연안 주변을 항해하고 있으며 24시간 공중에서 감시를 받고 있음.

● 美, 하와이서 北미사일 요격체계 가동(6/20, 연합)

- 로버트 게이츠(Gates) 미 국방장관은 18일 북한이 미사일을 태평양을 향해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망을 하와이로 이동해 둔 상태라고 밝힘. 게이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고(高)고도 지역방위시스템(THAAD) 미사일을



하와이로 다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SBX)도 하와이 인근에 배치됐다”고 밝힘.

- 그는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미국의 서쪽으로 발사할 경우 하와이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영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

● **백악관, 北 도발 지속으로 고립자초(6/17,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추가발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그 행위가 무엇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들의 조치와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
- 하지만 기브스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위한 다른 길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들이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길로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협상에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

● **美, 北 인신매매 최악, 감시대상국 유지(6/17, 연합)**

- 미국은 16일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으로 또 다시 지정, 미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이란, 미얀마, 쿠바 등 17개국을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을 계속 유지
-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 또 정치적 억압 수단의 한 부분으로 강제노동을 계속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 남성들에게 북한 여성을 파는 것과 같은 인신매매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다. 북·중 관계

● **北·中 해양기술협조 조인식 보도(6/19,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북한 기상수문국과 중국 국가해양국 사이에 해양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회담록이 19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류봉철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상수문국 대표단이, 중국측에서 천롄쥙(陳連燾)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해양국 대표단이 참가, 평양방송은 19일 중국 국가해양국 대표단이 귀국했다고 소개



● **北·中 청소년교류 진행(6/18, 신화통신)**

-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북한 평양의 동평양 제1중학교에서 ‘마오쩌둥(毛澤東)반’ 명명 50주년 기념행사가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 대사와 자매학교인 중국 베이징 제5중학교 ‘김일성반’ 대표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8일 보도, 양국은 1950년대에 대표적 지도자인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이름을 딴 학급을 각각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

● **中, 김정운 방중보도 사실무근 공식 확인(6/18,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운이 극비리에 방중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잇따른 보도는 “007 소설과 같은 얘기”라며 사실무근임을 공식 확인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극비리에 방중했던 김정운이 장남인 김정남과 함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했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보도내용과 같은 상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
- 그는 “이틀전 브리핑 당시 보도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측은 이같은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은 동양식의 함축적 표현이었다”고 말하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해주겠다”고 재차 강조
- 아사히신문은 16일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김정운이 10일께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 후 주석과 처음으로 회담했다고 보도한 뒤 18일에는 이 자리에 장남인 김정남이 동석했고 김정운은 17일 귀국했다고 후속 보도를 했었음.

● **北 인민무력부장 극비리 北京 방문(6/16,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핵심 측근이자 국방위 부위원장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6월 13일 극비리에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한 대북 소식통이 16일 전언, 주중 한국대사관 외교관들도 “북한의 거물급 인사가 평양발 고려항공 편으로 지난 13일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 귀빈실을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대북 소식통은 “베이징에 온 인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라며 “그는 북한의 권력을 승계받을 김정운의 생모인 고영희 라인”이라고 설명, 그는 김 부장의 방중 목적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개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北위협 끈이곧대로 해석 안해(6/18, 연합)

-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있는 끈이곧대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수사(rhetoric)가 실제 북한의 의도보다 더 위협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
-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그러나 “유엔 회원국(북한)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 이행 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깊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며 북한이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안보리 결의가 “균형 있고 깊이 숙고된 것”이라면서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막기 위해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상을 벌였음을 시사

마. 북·일 관계

● 日, 北선박내 미사일 부품 압수·처분(6/19, 니혼게이자이 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에 적재된 미사일 부품을 압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선박 화물 검사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골격을 만들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9일 보도
- 일본 정부는 법안에서 미사일 부품 등을 발견했을 경우 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주체는 해상보안청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항만이나 공항에서는 세관 등과 공조해 화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활동 가능 영역도 일본 영해는 물론 공해상으로 확대

바. 기타외교 관계

● 주북 쿠바대사 연회 개최(6/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사업 개시 45돌을 맞아 호세 몬타노 주북 쿠바 대사가 16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연회에는 김태중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이 초대되었음.

3. 대남정세

● 北매체,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보도(6/1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북한은 19일 열린 남북 당국간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겨냥, “우리민족끼리 하는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 문제를 바깥에 들고다니다 못해, 외세와 정상회담 탁자위에게까지 올려놓고 시비하며 무리한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느니 뭐니 한 것



은 참으로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는 보도

- 북측은 “남측의 제재 소동이 문제시 되는 것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더 큰 위기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는데 있다”며 “남측의 처사는 북남 사이의 협력공간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업지구 사업마저 부정하고 실무접촉 앞에 난관을 조성하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비난
- 북측은 자신들이 이미 제시한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와 임금·세금 등 개정안과 관련, “다른 나라와 남측 경제특구들의 경우를 충분히 참작하고 특히는 개성공업지구가 가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남측이 진정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유지를 바란다면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혁신적인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요구
- 북측은 특히 “토지값 문제만 보더라도 개성공업지구는 그 지리적 위치로 보나, 임대기한으로 보나 안보상 가치로 보나, 남측지역과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그런 노른 자위같은 땅을 통째로 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우리가 제시한 기준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며 남측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남측 대표단의 발언과 요구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음.

● 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있어(6/19, 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힘. 그러나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역류 근로자 석방,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다음 달 2일 회담을 속개하기로 합의,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회사무소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약 2시간40분간 회담을 진행, 양측 수석대표로는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주재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작년 12월1일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힘. 그러나 북측이 언제부터 풀어줄 것인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는지 등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음.
- 또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조성하는 비전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3국 공단을 남북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 이와 함께 우리 측은 남북간 합의·계약·법규 및 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 확립,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경제 베이스(기초)’ 아래 공단 발전 추진,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추구 등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

- 그러나 양측은 이날로 82일째 억류된 현대아산 주재원 유씨 문제와 북이 제기한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안 등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임. 우선 유씨 문제와 관련, 우리 대표단이 기조발언을 통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기 석방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유씨의 구체적 상태와 소재, 처분 방침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언
- 또 북측은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이미 완납된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는 기존 요구를 고수했으며 우리 측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남북간 기존 합의·계약·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北아동·산모용 의약품 3억여원어치 북송(6/17, 연합)

-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임종철, 이하 지원본부)는 오는 20일 북한 어린이와 산모 등에 필요한 의약품 3억여원 어치를 북한에 보냄. 지원본부는 17일 “지난 4월말 준공된 평양 만경대구역 칠골동의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에 어린이 환자의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장비까지 보낼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북 지원품 중 의약품만 반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우선 의약품부터 인천항을 통해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싱가포르 “北선박 접근시 적절히 대처”(6/20)

- 싱가포르 정부는 미사일 혹은 핵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호’가 자국 항구로 접근할 경우 ‘적절하게(appropriately)’ 조치를 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송 수단, 관련 물자의 확산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 선박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현재 미 해군은 북한의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방침에 따라 해상에서 ‘강남호’를 면밀히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의 폭스뉴스에 따르면 강남호는 지난 16일 북한을 출항, 현재 중국 연안을 지나 싱가포르 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해군은 구축함 존 매케인 호를 동원해 차단 작전 명령이 하달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유엔, 제재명단에 北기업 추가 검토(6/20)

- 유엔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기업들을 추가로 제재명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바키 일킨 유엔주재 터키 대사는 19일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북한 기업과 관련 인물들의 명단을 이미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 그는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목록이 좀 있고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어떤 나라가 이 명단을 제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미국과 일본, 영국이 이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음. 일킨 대사는 다음 주 말께 제재위원회가 다시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엔은 지난 4월 북한 기업 3개를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제재명단에 포함했음.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제재 조치를 취한 이후 설치됐음.



● “하와이 미사일 방어망..對北 예방조치”(6/20)

- 미국이 하와이에 미사일 방어망을 이동 배치한 것은 부분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정권에 대한 예방 조치이기도 하다고 미군 관리들이 19일 밝혔음.
- 이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과거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이래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크게 개선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고, 미군 등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경우 하와이에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실제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이론상으로는 하와이 정도의 먼 거리까지 비행할 수 있지만 세 차례 시험발사가 실패했거나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음. 이와 관련, 군의 한 고위 관리는 북한이 하와이의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동일한 경계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음.

● 美국방부 “北선박 움직임 추가정보 없어”(6/20)

- 미국 국방부는 19일 북한 국적선 ‘강남호’의 움직임에 대해 추가로 알려줄 내용이 없다면서 미국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셸 플라노이 정책담당 차관의 한·중·일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강남호의 움직임에 대해 새로 알려줄 게 없다”고 말했음.
- 그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행동해주길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번 북한 선박 추적에 대해 “미국이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철저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이 관계자는 강남호를 “관심 선박”이라고 표현해 강남호가 핵관련 물질이나 살상무기를 적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음.

● 러시아 “北미사일 발사준비 예의 주시”(6/19)

- 러시아군 총참모부 알렉산드르 부르틴 부총참모장(중장)은 19일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그 방향이 러시아 영토를 향한다면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음. 부르틴 부총참모장은 “우리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가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하며 그 시기를 말하는 것도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미사일) 감시 장비는 상시 가동 중이고 따라서 발사 수 초 후에 그 사실을 간파해 낼 수 있다”면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그것은 러시아 상공으로 날아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 쪽으로 날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격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반발해 2기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특히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전날 일본 방위성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7월 초 동창리에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며 미사일은 일본 아오모리(靑森) 상공을 통과해 미국 하와이로 향하는 궤도로 발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음.

● EU “對北제재, 지체없이 시행해야”(6/19)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성토힌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대(對) 북한 제재의 조속한 시행 의지를 확인했음.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19일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을 마치면서 채택한 ‘의장국 결론’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불안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위를 성토힌했음.
- 정상들은 의장국 결론에서 “가장 최근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 등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나아가 국제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라고 비난했음.
- 정상들은 이어 “북한 지도부 및 관련자들을 겨냥한 강제적 조치들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확고한 방식으로, 그리고 지체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EU 및 개별 회원국 차원의 조치로) 전이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8~19일 이틀간 열린 이번 정상회의의 3개 핵심의제인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 지명 ▲아일랜드 국민투표 재실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에서도 정상들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했음.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 국민투표 재실시를 위해 “일부 사안과 관련해서는 주권을 존중한다”라는 약속을 법적으로 ‘담보’하라는 아일랜드의 요구를 수용, 의정서 형태의 합의가 이뤄졌음.
- 나머지 26개 회원국은 아일랜드의 리스본 조약이 발효돼 EU 통합이 공고해져도 군사적 중립, 과세권, 낙태 등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서는 아일랜드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정서를 채택했고 이 의정서를 다음번 신규 회원국 가입 조약의 부속서로 추가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로 했음.

● “북한과의 ‘핵 치킨게임’은 위험”<FP>(6/19)

- 북한은 규칙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과 ‘핵 치킨게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미국이 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큰 “당근”을 준비하는 것 뿐이라는 주장이 나옴.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원자력관리 프로젝트’(PMA)의 장 후이 연구원은 19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가장 얻고 싶어하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을 얻을 때까지 긴장 고조 게임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물리학자이자 핵군비통제 및 중국 핵정책 전문가인 그는 독재자에게 굴복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필사적이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치킨게임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지적함. 그는 또 북한은 고립이 심화될수록 핵 카드로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불모를 위협하고 싶어질 것이라며 그런 게임에서는 모두가 패할 것이라고 말함. 장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이제 두 번의 핵실험 경험으로 4kt 정도의 소형 탄두를 남한 전역에 도달하는 스킵드 미사일에 장착하거나 일본 전역에 미치는 노동 미사일에 장착하는 데 더 자신감을 갖게 됐을 것으로 분석함.
- 4kt의 폭탄은 2차 대전 당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15~20kt보다는 위력이 훨씬 약하지만 서울과 도쿄 등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 그는 또 북한이 폐연료봉 8천개 중 3분의 1 이상을 재처리했다고 밝혀 3개월 안에 핵폭탄 1~2개를 더 만들 수 있는 8~12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봄. 그는 이어 북한이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있는 원심분리시설 개발에 성공하면 비핵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착수를 선언한 점을 주목함.
- 우라늄 농축시설은 원자로 등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플루토늄보다 훨씬 작고 은폐가 쉬울 뿐 아니라 폭탄 제조도 쉬워 북한이 매력을 느낄만하고 가격과 장소만 맞는다면 북한이 우라늄 공급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임. 장 연구원은 또 미국은 장기간 고립으로 북한이 붕괴하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필사적인 북한 정권이 조용히 침몰할 것 같지 않다고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 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 그러나 그는 북한은 장기간의 고립과 경제제재를 견딜 수 없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와 계속 악화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신뢰할만한 안전 보장 방안을 제안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예상함. 그는 이어 북한 의도가 무엇이든 미국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엔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협상을 위한 “채찍”을 준비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큰 “당근”을 준비하는 것뿐이라며 단순히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누구에게도 득이 안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함.
- 치킨게임은 국제정치학에서 사용되는 게임이론 용어로 서로 자동차를 최대한 끝까지 마주 몰다가 어느 한 쪽이 ‘치킨(겁쟁이)’이 돼 먼저 핸들을 돌리느냐를 겨루는 게임, 즉 어느 한 쪽도 양보하지 않고 극단적 대결을 추구하는 상황을 뜻함.

● 美백악관 “北 도발 지속예상..고립자초”(6/18)

- 미국 백악관은 17일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북한의 그들의 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추가발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그 행위가 무엇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들의 조치와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이 과거 수개월 동안 도발적인 행위를 하겠다고 하고서 도발행위를 했다”면서 “그들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왔다”고 지적함. 그는 “그 때문에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는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일들을 정확하게 추진했다”면서 “그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제재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기브스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위한 다른 길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들이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길로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협상에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함.

● 러-中 정상, 北에 6자회담 복귀 촉구(6/17)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함. 양국 정상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을 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함. 그러나 성명에 북한을 자극할 만한 언어나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넣지는 않았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보도함.
- 또 양국은 성명에서 이란 핵 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양국 무역에서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면서 루블과 위안화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외기권(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 및 무기 배치 반대를 촉구함. 이날 두 정상은 양국 기업과 정부 간에 이뤄진 가스, 광산업, 무역 증진 등 3가지 분야의 양해각서 체결식을 지켜봄.
- 앞서 두 정상은 16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폐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과 ‘브릭스(BRICs)’ 4개국 첫 정상회담에서 국제문제와 지역안보,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음. 한편, 후 주석은 이날 오전 모스크바 외곽 한 별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동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기로 함. 후 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가 상호 정치적 신뢰와 핵심 관심사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급진전되고 있으며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 관계를 외교의 최우선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함. 후 주석은 푸틴 총리에게는 오는 10월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는 내년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함.



● “美, 北 WMD 선적의심 선박 추적”(6/19)

- 미국 군 당국이 미사일 혹은 핵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국적선 ‘강남호’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8일 보도함. 폭스뉴스에 따르면 북한 선박 강남호는 지난 17일 북한에서 출항했으며, 미 군당국은 출항 시점부터 이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함.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이 이뤄진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2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물자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처음임.
- 미군 고위 당국자는 “이 선박은 관심을 가질 만하다”면서 강남호는 과거에도 확산활동에 연루돼 온 선박으로 ‘재범’이라고 표현했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의심되는 선박에 ‘강제로’ 승선, 검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 군당국은 강남호가 연료급유를 위해 기항할 때까지 추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군은 강남호가 특정국가의 항구에 기항할 경우, 해당국 정부에 연료공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북한은 그간 자국 선박에 승선, 검색을 하는 행위를 ‘전쟁’으로 간주하고, 백배천배의 보복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놔왔음. 이와 관련,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남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침에는 언급을 삼간 채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확실하게 이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결의안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분열성 물질, 핵무기 등을 선적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고 상기시킴.

● 美, 北대비 하와이에 미사일방어망 배치(6/19)

-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하와이에 미사일 방어망을 이동 배치한 것으로 확인됨.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망을 하와이로 이동해 둔 상태라고 밝힘. 게이츠 장관은 “THAAD(고고도방어체계) 미사일을 하와이로 다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SBX(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하와이 인근에 배치됐다”고 말함.
- THAAD는 대기권으로 진입한 적 미사일을 최종 단계에서 격추하는 미사일방어 체계로 미국은 이동식 발사대를 갖춘 요격미사일을 갖고 있음. 또 200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SBX는 최첨단 탄도미사일 추적 장비로, 4천800여km 떨어진 야구장의 야구공 하나까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으며, 미사일의 탄두와 유도장치, 파편 등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미국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에는 SBX 등을 하와이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는 북한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미국이 심각히 간주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임. 게이츠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미사일방어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이 배치된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를 자신이 방문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도 명백히 발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전함.

-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미국의) 서쪽으로 발사할 경우 하와이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미국이 미국 영토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면서 “우리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北 미사일·화학무기, 한국·일본 위협<ICG>(6/18)

-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을 다량 배치해두고있다고 국제위기감시기구(ICG)가 18일 밝힘. 명망있는 비정부기구 연구소인 ICG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둔 6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을 배치했으며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도 320기나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ICG는 또 별도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과 장거리포에 장착 가능한 수천톤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함.
- ICG는 북한의 화학무기가 한국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고 지적함. ICG는 북한이 저자가스와 사린 및 다른 치명적 신경계 독가스 등 모두 2천500톤-5천톤의 화학무기를 갖고있다는 데에 분석이 일치하고 있다고 밝힘. 대니얼 핑크스톤 ICG 서울사무소 대표는 “갈등이 격화되고 군사적 적대행위가 발생하면 이 화학무기가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일반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북한은 이 무기들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생물학 무기도 개발해 왔으나 이 무기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 ICG는 연초에 발표한 대로 북한이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정보도 이번 보고서에 다시 포함시킴.

● <北-스위스 커넥션..불법자금·核관련 기업>(6/1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정운씨 등 3남매가 유학한 스위스는 김 위원장이 이곳 은행계좌에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의혹,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 있는 등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중립외교 그리고 은행 계좌에 대한 엄격한 비밀 준수라는 전통을 배경으로 멀리 떨어진 양국이 기묘한 관계로 얽혀 있는 셈임.



- 스위스는 1963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북한과는 1974년에 국교를 맺음. 중세중립국으로서 동서 진영 간 대립에 가담하지 않았던 스위스는 당시 “남북한을 대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빠졌던 1995년에는 스위스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고, 1997년에는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식량 증산을 위한 원조를 개시함.
 - 2000년에는 미술린 칼미-레이 당시 스위스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한국을 찾기도 함. 김 위원장 자녀의 스위스 유학은 이러한 양국 간 관계가 있어서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그러나 2006년 북한의 핵개발에 스위스의 코하스 AG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부상하면서 미국, 일본, 호주 정부가 이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음.
 - 스위스에서 15년째 근무하는 이철 북한대사는 ‘김씨 일가의 금고지기’로서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인물임.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국 국무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약 40억달러의 자금을 스위스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북한은 강하게 부인했고 스위스 재무 당국도 “코멘트할 수 없다”고 함. 스위스의 은행법은 계좌 개설인의 동의가 없이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스위스 계좌가 테러나 자금세탁, 탈세, 조직범죄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임.
 - 스위스 국내에서도 “스위스의 특성을 악용한 북한의 불법 비즈니스가 횡행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음. 스위스에서는 북한이 위조한 명화들이 대거 나돌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음. 스위스 정부가 대북 관계를 재검토하는 징후도 있음. 스위스 정부는 개발협력청을 통한 대북 농업원조를 2011년에 중단할 방침임. 스위스 당국자는 “대외원조 전반의 축소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대북 독자 외교 상징의 하나가 사라지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함.
- “美, 5자대화 창설해야” <美싱크탱크>(6/18)
- 미국 행정부는 장기 공전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의 재개 노력과는 별도로 ‘5자 대화(five-party dialogue)’를 창설해 동북아의 지역안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함.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기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CNAS는 ‘환상은 없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 회복’이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포럼 신설을 주장함. 보고서는 “기왕의 6자회담과 확실한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 5자 프로세스는 동북아지역이 아닌 유럽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힘. 보고서는 “5자대화를



창설하게 되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커진 역내 안정과 협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이 북한 장단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보고서는 “5자대화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5자당사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북한의 최근 호전적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내야만 한다”고 요구함. 보고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며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 보고서는 “앞으로 추가 협상이 없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능력을 위협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불확실한 방법으로 해체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당근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시작전권 이양문제와 관련, “집권 한나라당 대표를 포함해 서울의 영향력있는 보수진영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시작전권 이양계획을 연기 또는 취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그런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힘.

● “北UEP, 기술 이전·확산이 더 큰 위협” <美전문가>(6/17)

- 북한은 우리늄 농축을 위한 대규모 원심분리기 시설을 내부에 건설하기보다는 원심분리기의 이전과 관련 기술의 확산에 더 큰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우리늄 농축프로그램의 진정한 위협은 원심분리기 기술의 이전과 확산 가능성이라고 미국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이 말함.
- 올브라이트 소장은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지원한 것처럼 우리늄 농축에 핵심인 원심분리기의 이전과 그 기술도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늄 농축 프로그램의 확산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의 확산보다 더 위험하다”고 강조함.
- 그는 “우리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는 크기가 매우 작아 분산운영이 가능한 등 은닉이 쉽다”며 “북한이 이를 이전, 확산하는 경우 대응 조치가 훨씬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북핵 협상에서는 북한의 원심분리기 기술의 확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임.

● “美 북핵문제 기로에 설듯” <랜드연구소>(6/17)

- 미국 랜드연구소 대북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으로선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 군사적 대응을 불사할 것인지 등을 놓고 기



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16일 랜드연구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베넷 박사는 최근 논평을 통해 “북한이 ‘북핵’ 도발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건 어려워 보이고 북한이 이성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군사적 대응으로 맞설 것인지를 미국은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함.

- 베넷 박사는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는 미국이나 국제 사회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큰 현실 때문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함. 그는 “북한은 최근 도발 행위를 통해 내부 권력 체제를 다질 수 있었고 로켓 발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과 마찬가지로 로켓 발사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그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도발 행위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게 되지 않는 한 위기 상황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에게는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 또는 계속 기다릴 것인지, 군사적 대응을 준비할 것인지 등의 선택 방안이 놓여 있다”고 말함.

● “北 우라늄농축 핵확산우려 심화” <美 전문가> (6/16)

- 미국의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15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플루토늄 핵무기보다 핵확산 우려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함. 유엔 핵사찰관을 지내기도 했던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 수출 전면금지 조치 등의 제재에 맞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착수를 선언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힘.
- 그는 “농축우라늄을 이용해 만든 핵무기가 플루토늄 핵무기보다 훨씬 더 소형화돼 있기 때문에 농축우라늄 핵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이 많다”면서 “농축우라늄 핵무기는 훨씬 더 확산될 위험이 높고 추적도 어렵다”고 말함. 그는 또 “북한 내부에 원심분리공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핵확산 문제가 훨씬 더 위험하다”면서 “그들은 시리아에 원자로를 팔았던 것처럼 농축시설인 원심분리기도 다른 나라들에 팔 수 있다”며 우라늄 농축기술을 통한 북한의 핵확산 위험성을 경고함.
- 올브라이트 소장은 “따라서 북한과 협상이 재개된다면 핵확산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북한으로부터 핵확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하지만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농축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의 진의를 파악하기 쉽지 않



다며 농축우라늄의 수준을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함.

- 그는 “연구 실험프로그램과 개발 프로젝트가 있지만 과장된 분위기가 있다”면서 “그들이 원심분리공장을 이용해 얼마나 빨리 무엇을 할 수 있는냐는 측면에서는 과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또 “(북한의) 성명은 그들이 농축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런 농축활동을 예상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북한이 과거처럼 농축프로그램 활동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용의주도한 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함.
-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원심분리공장과 관련, “클린턴 전 행정부는 일부 농축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일본도 이를 감지했었다”며 그동안 논란의 핵심은 규모 문제였다고 지적함. 그는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은 북한에 큰 원심분리공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올해 3월 국무부 관계자도 북한에 농축프로그램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함. 이와 함께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해 “4킬로톤이 성공인지 아닌지 모른다”며 “그들이 4킬로톤을 예상했다면 성공이고 10킬로톤을 예상했다면 실패일 것”이라고 지적함. 그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기술력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실험을 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함.

● 美 “北 핵실험 위력, 수 킬로톤”(6/16)

-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15일 북한이 지난달 25일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사실상 공식 확인하고,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은 수 킬로톤에 달했다고 밝힘. DNI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2009년 5월25일 풍계리 일대에서 아마도(probably) 지하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폭발력은 거의 수 킬로톤에 달했다”고 밝힘. DNI는 또 “이번 핵실험에 대한 분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임.
- DNI는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수 킬로톤”이라는 표현을 사용, 1킬로톤에도 미치지 못했던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 때보다는 규모가 컸음을 시사함.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위력은 15킬로톤과 21킬로톤이었음. 1킬로톤은 TNT 1천t의 폭발력과 맞먹음.

● 中 전문가 “北 3차 핵실험은 농축우라늄 원자탄”(6/15)

-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옴.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장롄구이(張璉圭 <王+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탄 실험을 할 것으



로 보인다고 말함.

- 장 교수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탄 실험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나 핵실험이 북-중 국경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지방이고 ▲휴전선에서 가깝지 않고 보안유지가 되는 지역임을 들음. 중국은 이에 따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중국에 미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장 교수는 주장함.

● “北 김정운 측근, 김정남 암살 기도”<KBS>(6/15)

-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로 급부상 중인 3남 김정운의 측근들이 최근 김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암살하려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KBS가 15일 보도함. KBS는 중국측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남 암살 계획이 최근 은밀히 진행됐으나 사전에 이를 알아챈 중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으며 중국측은 김정남을 은신처로 피신시켜 보호중이라고 전함.
- KBS는 소식통이 이런 기도가 김위원장 모르게 진행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함. 이 소식통은 김정남이 중국내 고위급 인사들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중국측이 김정남 보호에 적극 나섰으며 따라서 김정남은 당분간 은신처에 머물면서 망명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KBS는 덧붙임.

● “김정운, 김정일보다 힘든 상황 맞을 것”(6/15)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3남 김정운이 정권을 잡은 후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러시아판이 15일 보도함. 잡지에 따르면 북한은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후계자 지목이 믿을 만한 정보인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하기 어려움.
- 김일성 주석은 사망하기 20년 전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목했지만, 김정일이 지도자가 되고 나서 모든 기관과 정치 그룹들을 복종시키는 데 3년이 걸렸고 그러고 나서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낌. 하지만, 김정운은 의지할만한 사람도, 그를 지지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임. 따라서 아버지 김정일보다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자기만의 사람들을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임.
-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잡지와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통솔력을 갖춘 이들을 무섭게 쳐냈다. 김정운이 정권을 쥐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리더가 죽으면 ‘넘버1’이 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넘버2’들이 남게 되고 결국 권력 투쟁이 벌어진다. 스탈린과 마오쩌둥 사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함. 잡지는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김정운이 북한의 개혁을 바라는지 여부라고 지적함.



-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는 “북한 주민들은 아마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마오쩌둥 사후 중국처럼 북한을 끌고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그런가 하면 영국 ‘더 타임스’ 서울 특파원을 지낸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린은 “김정일이 10년 이상 지도자로 더 남을 수 있고 김정은은 김정일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몇십 년 동안 유지할 수도 있다”고 지적함.

나. 미·북 관계

● “北, 美지원 식량 감시없이 임의 배분”(6/20)

-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에서 식량배분 활동을 중단하면서 남겨둔 미국 정부의 지원식량 2만2천t을 북한 당국이 멋대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음.
- 익명의 미 국무부 관리는 “미국의 비정부단체들이 북한 당국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지난 3월말 북한에서 모두 철수한 후, 이 단체들이 배분을 끝내지 못한 식량 2만2천t을 북한 당국이 예정된 수혜자들에게 배분했다고 통보해왔다”며 “구호요원의 감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합의사항대로 배분했다는 북한측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음.

● 美재무부, 北 현금거래 감시강화 요구(6/19)

- 미국 재무부는 18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한 현금 거래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의보를 발령함.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발표한 주의 권고문을 통해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북한 은행 및 북한 기업 관계자들과 관련된 계좌가 개입될 수 있는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함.
- 재무부는 “모든 금융기관은 새로운 계좌나 기존 계좌로 많은 현금을 예금하는 북한 고객들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함. 재무부는 또 고도로 정밀한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우려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위조지폐 감식에 대한 경계도 촉구함. 이날 권고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 동결은 물론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모든 대북 금융지원을 금지토록 한 안보리 제재가 채택된 이후 나온 미국의 첫번째 구체적인 금융관련 조치임.
- 특히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금융기관들에 대해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계 금융기관을 통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 금융봉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재무부는 이날 북한이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들을 동원할 수 있다면서 경각심도 당부함. 구체적인



가능한 속임수로는 북한이나 북한 기업, 관계자들이 신분이나 거래의 출발점을 속이거나 제3자를 통해 우회 거래하고,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은행간 거래를 되풀이 할 수 있다고 전함. 재무부는 이날 17개 북한 은행들의 리스트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위조지폐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밝힘.

● ICG, 美에 대북 최고위급대화 권고..“외교가 최선”(6/18)

- 유럽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은 18일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억제와 봉쇄의 뒷받침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외교가 최선의 방안”이라며 미국에 북핵 6자회담 유지와 대북 최고위급 직접 대화를 권고함. ICG는 북한문제 특별보고서 ‘북한: 대화로 복귀시키기’를 최종 확정발표하기 앞서 미리 배포한 언론보도용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게 평양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2차 북핵 실험후 뾰족한 대응수가 없는 상황에서 “외교가 가장 덜 나쁜 옵션”이라며 이같이 말함.
- 보고서는 그러나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 일치된 대북 결의 1874호는 이행해야 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와 핵 확산에 대한 봉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방법으로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동북아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구로서의 잠재적 가능성”까지 감안해 6자회담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과 최고위급 직접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 이같은 대화 시도는 “잘 되면” 타협안을 도출해 낼 수 있고 “잘못 돼도” 북한의 동기와 야망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북·미간 고위급 대화(engagement)는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래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역설함.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의 사고는 한국전쟁과 특히 깊은 대미 안보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며 북·미간 직접적 양자대화가 열릴 경우 6자회담의 ‘행동대 행동’ 원칙에 구애받지 말고 한국전의 정식 종결, 연락 사무소 설치, 외교관계 수립,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이 같은 방법이야말로 비용은 적게 들고 북·미간에 상당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임. 보고서는 외교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보류하면서 “북한이 붕괴하기만 기다리는 것은 늘 실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같이 “순전히 북한과의 양자간 문제가 비핵화라는 핵심 이슈의 해결을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함.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정책권고안으로, 북한에는 6자회담의 복귀를 촉구했고, 미국에 대해선 한·미·일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부활시켜 6자회담내 정책 조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함.

-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대북 억지와 봉쇄 메시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핵억제력 확보’라는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선제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이나 최소한 타자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게 핵무기의 유일한 역할이라는 선언을 부각시킬 것을 권고함.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서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를 분리하고, 미사일방어망을 제한적으로 갖추되, 외교적 해법이 실패하지 않는 한 미국과 일본의 통합 미사일 방어시스템(MD)에 전면참여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고함. 보고서는 또 중국에 대해선 북한의 6자회담 복귀까지 ‘조중우호협력친선 상호조약’을 잠정 중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美하원 청문회, 북핵 해법 공방>(6/18)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와 대테러, 비확산 소위원회가 17일 공동개최한 청문회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법과 대북 협상의 미래를 놓고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짐. 이들 전문가는 북한의 최근 핵 및 미사일 발사실험이 90년대 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이러한 위협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를 드러냄.
-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4월5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과 5월 25일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의 성격을 변화시켜 동북아에서 게임의 양상이 달라졌다”면서 북한이 가시적인 장래에 핵을 포기할 희망이 사라졌다고 우려를 표시함. 20여년전 북한 핵프로그램이 드러났을 때만 해도 협상을 통해 북한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변화로 그런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임.
- 부시 선임연구원은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포기라는 6자회담의 논리적인 근거도 상실하게 됐다며 6자회담의 미래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임. 그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벼랑끝 협상전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와 관련된 군부 위상 강화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북한이 이런 제재에 당장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함.
- 부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후계구도가 마무리된 뒤에야 북한에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다자 제재 방안으로는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김 위원장 사후에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변화가 불가피하며 그 변화 가능성 중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붕괴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주문함.
-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도 “2009년에 맞이한 북한의 위협



은 90년대 초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시함. 허바드 전 대사는 “과거 15년동안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난 뒤 양자회담을 통해 핵프로그램을 양보하는 대가로 금융지원을 받는 것에 맞춰진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재는 북한 내부의 변수가 북한 지도부를 움직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고 분석함.

- 허바드 전 대사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와 맞물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협상의 칩 보다는 최상의 안보확보 방안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은 과거 한국, 미국 등과의 유화정책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과거의 고립 정책으로 회귀해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함. 반면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대북 압력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보복행위를 촉발시켜왔다면서 미국인 억류 여기자 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긴장 해소를 위해 앨 고어 전 부통령 등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해리슨 국장은 “대북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최후의 비핵화 목표 진전을 위한 필수조건인 북미 관계정상화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함. 그는 또 “북한이 지난 13일 우라늄 농축을 위한 연구개발(R&D)프로그램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수준을 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는 전망을 높여준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이 초기단계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농축프로그램을 민수용으로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벌일 시간이 있다”고 주장함.
 - 해리슨 국장은 고어 전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2명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 등을 벌이기 위해 방북 의사를 지난 5월11일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을 만나 타진했는데도 국무부는 후속 조치를 미뤄오고 있다며 여기자 문제를 인도적인 문제로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국무부의 입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함. 해리슨 국장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공격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이유로 외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전쟁능력을 과도하게 판단하고 있는 젊은 민족주의 성향의 북한 군부가 김 위원장 와병이 후 지도부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음.
- “北 3년내 장거리미사일 기술적 결함 극복”(6/17)
-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군 합참 부의장이 미국이 최소 3년 내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함.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카트라이트 의장은 16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앞으로 3~5년 사이에 기술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미국의 태평양 연안(West Coast)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그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탄두 개발에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발언이 단지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함. 카트 라이트 부의장은 미군 전략사령본부장을 역임하면서 미국의 핵전력을 감독한 경험이 있음. LA타임스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미 태평양 연안 타격을 목적으로 설계됐으나 현재까지 시험 발사는 모두 실패했다고 소개하고, 안보 전문가들이 대포동 2호가 부정확하며 지금까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단계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함.

● <오바마, 북한엔 ‘압박’- 이란엔 ‘외교’>(6/17)

-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에 대응해 두 나라에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함. 북한에는 외교보다는 ‘위압적인 압박’이라는 강경 대응을, 이란에는 압박보다는 ‘외교’를 통해 대응한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구상이라고 신문은 전함. 신문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공해상의 선박 검색 등과 같은 보다 대결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시위대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미묘한 정치적 접근법을 취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이 오바마 정부의 참여 정책의 매우 다른 실험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설명함.
-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별도의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이들의 동기가 매우 다르다는 평가에 기초하고 있음. 오바마 정부의 분석으로는 북한은 생존 전략을 추구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세계로부터 문을 닫는 ‘수세적인 웅크림’에 들어가고 있음. 북한은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려는 환상은 갖고 있지도 않으며 주요 목표는 생존이고 무기 수출을 통해 돈을 버는 기회를 가지려는 것일 뿐이라는 것임.
- 반면 오바마 정부에게 이란은 중동의 강대국으로서 전통적인 역할을 복구하고자 하는 보다 역동적이고 열린사회로 보이고 있고 핵 프로그램은 이런 위상의 복구를 위한 기회를 복돋우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즉 이란은 북한과 달리 완벽하게 실험된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평화적 핵 시설을 무기로 전환할 능력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임.
- 북한과 이란에 대한 이런 상반된 동기 분석은 대응에서도 다른 방향을 유도하고 있음.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화물 운송과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위압적 압박’ 정책을 통해 대결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이 식량이나 연료, 안전보장을 대가로 그들이 ‘핵 억지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따라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협상을 다시 하는 것은 쓸데없는 전략이라는 결론에 기반하고 있음. 이런 전략은 이미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실패함.

-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그가 북한 및 주변국들과의 회담이나 직접적인 양자 논의에 기꺼이 나설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북한 핵시설의 점진적 해체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음. 또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이 최근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사는 것에 지쳤다”고 말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 해법으로 에너지나 식량, 안전보장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신문은 그러나 이런 대결적인 정책에는 큰 위험도 따를 수 있다고 분석함. 북한에 금수대상 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에서 정지시키고 검색함으로써 북한 경제에 최후의 돈을 막을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선박에 발포를 하는 식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건을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임.
- 미 태평양군사령부의 고위 관계자는 신문에 “지금 당장 가장 큰 걱정이 아주 명명한 짓을 할 북한의 선장”이라며 “선박을 붙잡아 정지시킬 때 누군가 흥분을 참지 못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해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함.

● 美 “北인신매매 최악”..감시대상국 유지(6/17)

- 미국은 16일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으로 또 다시 지정함. 미 국무부는 이날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이란, 미얀마, 쿠바 등 17개국을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함.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힘. 또 정치적 억압 수단의 한 부분으로 강제노동을 계속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 남성들에게 북한 여성을 파는 것과 같은 인신매매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노동과 매춘 인력 제공국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탈북자들 중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함.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만명의 탈북자들 중 80% 이상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NGO(비정부기구)의 추정도 있다고 전함. 보고서는 중국 동북지역 및 북중 국경 지대에 조선족 및 북한인들이 운영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있다고 주장함.
- 한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최상인 1등급 국가로 계속 분류됨.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 여성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홍콩, 서유럽 등지로 팔려가고 있으며 반대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의 여성들은 성매매 대상 등으로 한국 내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함.

-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전하면서 일부 한국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한편 올해 최악등급 명단에는 말레이시아와 차드, 에리트레아, 니제르, 모리타니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등이 새로 추가됨.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피지, 파푸아뉴기니, 수단, 시리아 등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포함됐으며, 카타르, 오만, 알제리, 몰도바는 올해 제외됨.
- 인신매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 미국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라고 미국이 분류하는 나라로, 연속 2회 지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나 세계은행의 해당 국가 대출을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되어있는 등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됨.

● 美 “北미사일 90% 이상 요격 가능”(6/17)

-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국 합참 부의장은 1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과 관련, “앞으로 5년간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북한 등 ‘불량국가’의 미사일을 ‘90% 플러스’로 요격가능하다”고 밝힘.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국방예산 심의를 위한 청문회에 출석, “향후 3-5년간 북한, 이란의 미사일 위협은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함.
- 또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만일 그들(북한, 이란)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확보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탄두를 대기권에 재진입시켜 타격목표를 찾아내도록 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함.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뒤 기자브리핑에서 “당신이라면 연거푸 3번 실패한 국가에서 (미사일을) 구입을 하겠느냐”고 말하는 등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능력을 평가절하해 옴.
- 반면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윌리엄 린 국방부 부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함. 린 부장관은 “이 때문에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30기의 미사일만으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힘.
- 미국은 애초 지상배치형 미사일을 44기까지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현행 33기로 동결하기로 하고 2010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미사일방어 관련예산을 삭감해 의회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임.



다. 중·북 관계

● 北축구단 유니폼 후원 中 업체 대박(6/20)

-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북한 선수단 후원사인 중국의 스포츠용품 메이커 ‘차이나 홍싱’(鴻星)이 북한이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 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다시 대박을 터뜨렸음. 북한 축구선수단이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 대망의 월드컵 본선 티켓을 거머쥔 후 그라운드에서 서로 껴안고 감격해 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방영되면서 선수들의 유니폼 제작사인 홍싱사는 예상 밖의 황재를 기록했음.
- 북한 선수단이 입은 ‘얼커’(Erke.爾克)는 홍싱사의 스포츠 의류 브랜드. 홍싱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도 북한 선수단에 의류와 신발 등 장비를 후원해 북한이 6개의 금메달을 따면서 톡톡히 홍보 성과를 올렸음.

● 中전문가 “北-中 관계 큰 틀에선 변화없다”(6/19)

- 중국은 북한의 두번에 걸친 핵실험에도 전통우호 관계를 골간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큰 틀에서는 바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중국에서 나옴. 중국의 국제뉴스 전문지 세계신문보(世界新聞報)는 최신후(19일자)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중국은 인접국의 안정을 바라는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순망치한(唇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는 관계) 관계인 북-중관계를 큰 틀에선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봄.
-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대북 유화정책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중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의 현대화 추진에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는 것임.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에 강력 반대하지만 특정 국가가 북한 정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압력을 세계 행사하는데도 반대한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임. 한반도에 안정이 무너지 전쟁이 나면 무수한 난민이 발생하고 방사능 오염 등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나타나 중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임.
- 한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들도 나옴. 상하이(上海) 국제문제연구원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위잉리(于迎麗)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컸다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핵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중국의 영향력은 서방의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쑤젠항(孫建杭)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안보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미국때문이므로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北·中, 해양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서명(6/19)

- 북한 기상수문국과 중국 국가해양국 대표단이 19일 앞으로 2년간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협정서에 서명함. 중국 신화통신은 북한과 중국이 지난 16일부터 평양에서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제14차 회의를 열고 해양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함.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해양위성자료 이용 및 해양 감시방법, 서해안 기후변화 공동 연구, 해양 장기변동 예측방법 연구, 서해안 생태 조사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됨.

● 北주재 외교관 “김정일 건강 악화”(6/1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최근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평양시내는 별다른 이상없이 평온하다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8일 북한주재 한 국가 대사의 말을 인용, 보도함. 익명을 요구한 이 대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크게 악화돼 국내정세가 복잡해졌고 김 위원장은 이 때문에 3남인 김정운을 일찌감치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이 외교관은 그러나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를 절대비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은 관련 소식을 전혀 전해들을 수가 밝힘. 이 외교관은 이어 평양은 16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규탄하는 10만 군중집회를 개최한 후 평온을 되찾았다고 전함. 평양 거리는 안전하고 계엄의 조짐도 없으며 시민들은 출입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 외교관은 말함.
- 평양에서는 민감한 시기를 맞아 전화가 모두 도청되기 때문에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베이징에 출장왔다는 이 외교관은 평양주재 다른 국가 외교관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어서 베이징이 북한 외교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털어 놓음. 북한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에 찬성한 것은 어쩔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을 크게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중국을 친구로 여기고 있다고 이 대사는 말함.

● “北, 주중대사관에 정운 후계 시사 전문”

- 북한이 지난달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3남 정운씨를 내정하고 후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전문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보낸 것이 확인됐다고 도쿄(東京)신문이 북한 관계자 및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전문 내용은 지난달 30일 베이징 주재 최진수(崔鎭洙) 북한대사가 관원들에게 전달함.
-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북한 당국이 김정운의 후계 선정 사실을 담은 외교전문을 해외 주재공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한 바 있음. 북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에서 주중 대사관에 전달한 문



터 후계자가 될 의사가 있느냐는 타진을 받았지만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정남씨는 조선노동당이나 군의 직책에 취임하지 않고, 마카오에 살면서 비즈니스에 관여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의 파이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씨가 중국을 방문한 10일 전후 정남씨도 마카오에서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인민무력부장 극비리 北京 방문”(6/1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핵심 측근이자 국방위 부위원장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13일 극비리에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한 대북 소식통이 16일 전함. 주중 한국대사관 외교관들도 “북한의 거물급 인사가 평양발 고려항공 편으로 지난 13일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 귀빈실을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힘.
- 한국 외교관들은 당시 국제금융연합회(IIF) 총회 참석 등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한승수 국무총리의 귀국 항공편 탑승을 준비하기 위해 서우두국제공항 귀빈실에 선발대로 나가 있었음. 이들은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공항 귀빈실 안팎을 수색하는가 하면 귀빈실 주변지역 행인 출입을 봉쇄하는 등 초특급 경호를 펼쳤다”고 말함.
- 이들은 “곧이어 북한의 거물급 인사가 주중 북한대사관 소속 의전용 1호 차량에 올라탔으며 중국 특수부대 요원들이 탑승한 차량 5대의 호위를 받으며 베이징 시내로 들어갔다”고 말함. 이와 관련, 대북 소식통은 “베이징에 온 인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라며 “그는 북한의 권력을 승계받을 김정운의 생모인 고영희 라인”이라고 설명함.
- 실제로 북한이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규탄 군중대회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대신 주재해 김 부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뒷받침함. 그는 김 부장의 방중 목적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그는 “그러나 김영춘 부장의 나이가 올해 73세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신병치료차 중국을 방문했다면 베이징을 경유해 프랑스나 러시아에 있는 병원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함.

● “김정운, 이달 10일 전후 김정일 특사로 방중”(6/1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3남 정운씨가 지난 10일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했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6일 보도함. 신문은 또 정운씨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회담함에 따라 그가 김정일 위원장



- 의 후계자로 내정됐음이 중국측에 직접 전달됐다고 전함. 신문은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김 위원장과 가까운 북한 소식통과 베이징(北京)의 북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정운씨는 지난 10일을 전후해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함. 후진타오 주석 이외에도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간부들과 잇달아 회담을 가짐. 정운씨가 이미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명돼, 조선노동당의 요직인 조직지도부장이 됐다는 것도 회담에 동석한 측근들로부터 중국측에 전달됨.
 - 후진타오 주석은 정운씨와의 회담에서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차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중지를 요구하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등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운씨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대비해 중국에 대해 에너지, 식량 긴급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함.
 - 정운씨는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광둥성 선전, 광저우도 방문해 하이테크 공장 등을 시찰했음. 이들 지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6년 1월 방중 시 찾았던 곳임. 북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과 같은 경로를 찾음으로써 정통 후계자라는 점과 개혁개방정책을 평가하고 있음을 외부에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김 위원장도 후계자로 내정됐던 이후인 1983년 6월에 중국을 방문, 당시 최고 실력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과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 등과 회담한 바 있음.
 - 왕자루이 부장이 올 1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그의 방중 요청을 수락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돼 온 건강문제 때문에 “체력적으로 장기간의 외유는 적합하지 않아”(북한 소식통)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정운씨의 특사 파견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던 지난달 23일 이후인 5월 하순 노동당 간부가 중국을 방문해 타진해서 이뤄짐. 북한 소식통은 “정운씨가 김 위원장의 명의(특사)로 첫 외교 행보를 장식한 것으로, (후계문제와 관련한) 중국과 북한간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핵실험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중국측에 이해를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함.

라. 일·북 관계

● 日, 방위력 장비-인력 증강 방침(6/21)

- 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맞선 전력 강화를 위해 장비와 요원을 증강하고 방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 책정하는 2010년부터 2014년의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 “장비, 요원의 감축 방침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 또 냉전시대가 끝난 후인 1995년 책정한 방위대강부터 감축추세를 보여온 국방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정세 변화에 따른 선택 방안의 하나로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방위대강에 포함하기로 했음.
- 이는 침략을 당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장비와 요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4년 책정된 현행 방위대강의 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방위력 증강에 나설 경우 주변국을 긴장시킬 가능성이 큼.
- 방위계획 대강은 향후 5년간의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총리실에 설치된 전문가회의에서 검토 중임. 일본 정부는 전문가회의 보고서와 자민당의 제언을 참고삼아 최종안을 만들어 연말에 각료회의에서 확정함.
- 방위대강 기본방침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동향과 관련해 “현재 방위력으로는 각종 사태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으로는 현행 방위대강이 정한 육상자위대 정원을 15만5천명에서 16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음.

● 日, 北선박내 미사일 부품 압수·처분(6/19)

-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에 적재된 미사일 부품을 압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선박 화물 검사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골격을 만들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9일 전함. 이 법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등을 포함한 제재 결의를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임. 일본 정부는 법안에서 미사일 부품 등을 발견했을 경우 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주체는 해상보안청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항만이나 공항에서는 세관 등과 공조해 화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음. 활동 가능 영역도 일본 영해는 물론 공해상으로 확대함.
- 일본의 현행법에는 해상보안청이 화물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일본 영해내 뿐임. 또 검사 대상은 마약단속법, 총포도검법 등 일본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로 제한돼 있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공해상의 화물검사를 해상자위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이에 반대하는 점을 고려, 정부는 해상보안청이 북한 선박 화물검사를 모두 실시하도록 함.

마. 기타

● “김정운, 北국방위원장 대행 집무” <마이니치>(6/20)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3남 정운씨가 국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행’으로 집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이니



치(毎日)신문이 20일 보도했음.

- 신문은 이날 석간에서 북한 지도부와 가까운 복수의 관계자가 증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위원장 대행’은 정식 직책이 아니지만, 북한 내 최고 지위인 국방위원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보여 정운씨가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혔다고 할 수 있음.
- 마이니치는 북한군 중추기관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올해 초 정운씨가 후계자로 선출됐다는 내부 통지를 보낸 바 있다며 그 후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중심으로 후계 체제 정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
- 또 인민무력성과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김정은 영도체계의 아래”라는 용어가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지난달 25일 이후에는 복수의 재외 공관에 후계자 결정 전문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달 초순에는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전국 당 조직에 정운씨의 후계 내정을 전달했으며 당시 “지금은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가주석의 후계로 결정될 당시와는)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후계자가 누군가에 대해 숨길 필요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말씀’도 첨부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 “北, 국제 보험 사기로 현금 조달”<WP> (6/18)

-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인 보험사기를 통해 상당액의 필요한 현금을 조달해왔다고 워싱턴 포스트 지가 18일 보도함. 북한은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사고나 공장화재, 홍수피해 및 기타 자연재해등을 내세워 외국 유명 재보험회사들로부터 수억달러를 받아냈으며 이에따라 국제 보험시장에서 북한에 대한 재보험이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포스트지는 전함.
- 북한의 ‘세련된’ 보험사기는 주로 조선국영보험공사를 거쳐 재보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남. 포스트 지는 보험공사의 간부를 지낸 김광진씨의 말을 인용해 지난 2003년2월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아 낸 2천만 달러가 싱가포르로부터 베이징을 거쳐 평양의 지도자 김정일에게 직접 보내졌다고 전함. 부시 행정부 국무부에서 북한의 불법활동을 추적했던 데이비드 애셔는 이 2천만 달러가 당시 핵문제로 벼랑전술을 펴고있던 김정일이 권좌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힘.
- 그는 “이러한 선물들이 계속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최대 불법 수입원 가운데 하나가 되고있다”고 주장함. 북한이 그동안 현금 확보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헤로인에서 비아그라에 이르는 불법 약물들과 가짜 담배·위조지폐 등을 제조해온 사실은 알려졌지만 보험 사기의 경우 연루된 국제 보험사들이 공개를 꺼리는 탓에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아옴. 지난해 독일의 알리안츠와 영국의 로이드를 비롯한 일부 재보험사들이 북한이 주장한 2005년 헬리콥터 추



락사고 보상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험 사기의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함.

- 보험사들은 추락사고가 연출됐으며 이에 대한 북한 법원의 결정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런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북한 측과 합의함. 보험사들은 북한에 대한 사기 주장을 철회하고 북한이 요구한 금액의 95%를 지불기로 합의해 사실상 북한측에 승리를 안겨줌. 보험사들이 합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런던 소재 한 법률정보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북한 측과 ‘북한 법에 따르도록’ 계약한 약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싱가포르 지점을 거쳐 한국에 망명한 김광진씨는 현재 재보험사들의 후원으로 워싱턴의 한 비영리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음. 북한의 보험사기에 대한 그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그가 신뢰할만한 정보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서울 소재 아시아 전략연구소의 박승제 연구원도 일부 북한 망명자들로부터 김광진씨와 유사한 보험사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히고 있음.
- 한국 정부도 북한의 보험사기를 알고 있으나 긴장악화를 우려해 공개 거론하기를 원치않고 있다고 박 연구원은 전함. 북한은 또 헬리콥터 사고 외에 2006년 중 2건의 열차사고와 한 건의 연락선 침몰 등 3건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는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등으로 북한이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포스트는 지적함.
- 헬리콥터 사건 이후 유럽과 아시아 재보험 시장에는 북한과의 거래에 경보가 내려짐. 헬리콥터 사건에 관여했던 한 영국 보험 전문가는 모든 보험사들이 “분쟁이 북한법정에서 판결돼서는 안되며 아울러 절대로 북한 국영보험공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전함. 이에따라 북한 보험공사는 재보험을 받아 줄 보험사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서로 다른 잠재적 자연재해와 다른 재보험사를 물색해 왔다고 김광진씨는 밝힘.
- 또 일부 보험사들은 고립적인 북한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수가 있으며 일부는 한국 회사와 거래하는 것으로 착각해 재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런던의 한 전문가는 전함. 김광진씨는 자신이 국영보험공사에서 일할 때 연평균 재보험청구 수입이 5천만-6천만 달러였으며 이 수입 대부분이 북한 내 잠재적 재해들을 찾아내고 국제시장에서 재보험을 매입하고 또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사용됐다면서 나머지는 실제 재해복구에 사용돼야 했으나 실제로는 김정일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말함.
- 그는 매년 김정일의 생일인 2월16일 직전 2천만 달러의 현금이 평양에 도착하며 자신이 6년 간 보험공사에 있는 동안 싱가포르와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지로부터 현금백들이 도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로 넘겨졌다고 밝힘.



● 베트남,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재확인(6/15)

- 베트남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비핵화 지지 입장을 재확인함. 레 중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국영 베트남 통신(VNA)과의 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1784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베트남의 일관된 정책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핵무기의 비확산과 궁극적인 완전 철폐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런 정신 하에서 베트남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지지한다”고 확인함.
- 중 대변인은 그러나 “결의안 이행은 국민들의 생명, 인도적인 활동, 적법한 경제 활동 및 개발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의안 1784호는 현 사태에 대한 평화롭고, 외교·정치적인 해결에 대한 안보리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함. 중 대변인은 6자회담을 포함해 대화를 통한 포괄적 문제 해결과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국가들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국방부 내주 한중일 순방 대북공조(6/20)

- 미국 국방부 대표단이 다음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대북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내주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함. 미 국방부는 19일 미셸 플러노이 정책담당 차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의 한·중·일 3국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음.
- 국방부는 플러노이 차관이 23-24일 중국, 25일 일본, 2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국 방문은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 한미정상회담에 뒤이어 곧바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플러노이 차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구체화 및 실현 방안을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 동맹 관계에서 상호 목표와 목적들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또 “한국과 굳건한 관계를 지속하고 미래를 위한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하나의 위협만 보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음.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23일과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이틀 동안 개최하는 제10차 미중 국방자문



회담(DCT)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행 등 대북 정책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플러노이 차관은 중국과 공통의 이해 관계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북핵포기에 중·러 협력 긴요”(6/18)**

-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포기 결심을 이끄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그 기초는 한·미동맹과 공고한 한·미·일 공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블레어하우스(백악관 영빈관)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등 한반도 전문가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함.
-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으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을 뺀 6자회담 참가국) 5개 나라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후에 한·미 FTA에 대해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나 어제 정상회담 과정에서 FTA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무역뿐 아니라 외교·안보 동맹 등 전략적 측면에서도 한·미FTA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이 자동차산업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미국 산업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측 참석자들도 한·미 FTA가 경제·통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미간 전략적 동맹이라는 안보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김 부대변인은 전함.
- 미측 참석자들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함. 사회를 맡은 존 햄리 전 국방부 부장관은 “지금처럼 한·미관계가 좋을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임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이 긴밀한 조율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특히 “현재 북한문제는 권력승계 등 내부 상황과 맞물리면서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한·미 정책당국간 더 세밀하고 섬세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함. 이날 간담회에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



장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국가안보 보좌관, 칼라 힐스 전 무역 대표부(USTR) 대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등 과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거물급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함.

● **李대통령 “北위협에 굴복 않을 것”(6/17)**

- 이명박 대통령은 17일(미국 현지시간) “우리 국민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위한 노력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날 조지 워싱턴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확고한 의지와 항구적 평화에 열망을 안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이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한반도에서의 핵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야 하며 핵을 포기하는 것이 핵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욱 이로운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함.
-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모든 나라들이 도울 것”이라며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1874호 결의 역시 이를 위한 모든 참가국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또 “21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가치로 자유, 평화, 친환경을 꼽고 싶다”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구촌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확대해나가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징후다. 인류는 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녹색성장은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녹색성장은 당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분야 국정지표는 ‘글로벌 코리아’다. 글로벌 코리아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코리안 루트”라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국제기준의 적용대상국에서 설계자로, 변방의 약소국에서 당당한 중심국으로 진입하고자 한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43개국에서 1천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해외 봉사단원을 앞으로는 매년 3천여명씩 파견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함.

● <李대통령-美CEO, FTA ‘한목소리’>(6/17)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재계 CEO(최고경영자)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에 대한 지원을 당부함.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세계 여러분들이 비준을 위해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함. 특히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20여년간 한·미 FTA 체결 등에 기여한 공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태미 오버비 전 대표에게 직접 은탑 산업훈장을 수여함.

-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산업훈장의 대통령 직접 수여는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오버비 전 대표가 경제위기속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온 데 대한 격려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함. 이날 간담회는 참석한 양국 재계 인사들이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먼저 이 대통령은 GE에너지의 존 크레니키 대표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계획을 묻자 “모든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노력 중”이라면서 “전력을 절약하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기술 개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함.
- 또 금융 등 서비스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한 메트라이프의 윌리엄 토피타 대표의 질문에는 “(한국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FTA가 되면 한국의 금융서비스 산업이 단기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선진금융 기법을 배우는 기회가 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함.
- 이밖에 이 대통령은 “한국의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한 전망은 무엇이냐”는 타임워너의 휴 스티븐스 수석부사장의 질문에 “방송통신 융합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했으며, 미디어법도 국회에 상정 중”이라고 소개한 뒤 “콘텐츠는 발전이 더 이뤄져야 하는 분야로 기회가 되면 좋은 회사들의 한국진출을 기대한다”고 말함.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유력기업 대표들의 한·미 FTA 조속 비준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어짐.
- 씨티그룹 윌리엄 로즈 씨티그룹 회장은 “신념과 용기로 FTA가 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세브론의 마이클 워쓰 부대표도 “한·미 FTA를 지지하며, 업계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함.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의 부사장은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뒤 “내년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업계에서 비준을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한국에 10억달러 규모의 녹색산업 투자를 결정한 미국 JP모건의 윌리엄 데일리 부회장 일행을 만나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시작한 일인 만큼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감사의 뜻을 전함. 이에 데일리 부회장은 “우리의 이번 녹색투자가 한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투자유치를 잇따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함.

● <정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작업 착수>(6/17)

- 정부는 17일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전날 양국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함. 외교통상부는 각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아프가니스탄 재건 협력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섬.
- 특히 이날 오후에는 국제기구국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무기금수와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골자로 한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검토함.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대응 차원에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은 아니지만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이행 조치 계획을 마련해 안보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함.
-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등 10여 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 1명과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함.
- 특히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히 밝힘에 따라 19일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는 북측에 억류된 유모씨 문제와 함께 근로자 숙소 및 출퇴근 도로 건설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에 집중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협상전략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선 19일 회담 준비를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함.
-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등을 중심으로 후속 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짐. 군 관계자들은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작권 전환 시기와 아프간 파병 문제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되자 “일단 짐을 털게 됐다”는 분위기지만 검토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은 만큼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
- 또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 소요가 발생하면 검토 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기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임.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정상회담 후속과제가 식별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제가 식별되면 이



를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함.

● <李대통령, 美의회에 북핵·FTA 협조요청>(6/17)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방문, 상·하원 지도부 인사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북핵문제 및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이 대통령은 먼저 하원을 방문, 낸시 펠로시 의장과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남북관계 지지 결의안 채택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을 위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함.
- 미 연방 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중단 및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5개항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미 의회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돈독히 해 주는 든든한 후원자라고 할 수 있다”면서 “어제 남북문제에 대해 결의해 주신 의원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 수록 한·미동맹은 공고하며,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데 함께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결의안이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에 용기를 얻었다”고 평가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함.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됐다”면서 “이로써 세계 모든 국가들도 북한 비핵화에 역할을 할 장(場)이 마련됐다”고 강조함.
-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아주 오랜 역사적 동맹관계로서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한반도에 핵없는 정책을 성공시키겠다”고 역설함.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해 미 의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짐.
- 간담회에서 펠로시 의장은 “한·미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양국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함. 또 찰스 랭글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1950년 한국전에 참전했었다”고 소개한 뒤 “참전용사로서 한국에 느끼는 우정과 신뢰가 각별하다”며 “더욱 긴밀한 동맹을 위해 많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함.
- 이어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역시 북한문제, 한·미 FTA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함.



● 美하원 ‘北 대남 적대행위 중단’ 결의안(6/16)

- 미국 연방 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중단 및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하원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은 피터 킹(공화·뉴욕) 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중단 등 5가지 결의사항을 담고 있음.
- 결의안은 먼저 “북한은 즉각 남한에 대한 호전적인 레토릭과 행동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제고를 위한 상호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이어 결의안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하라고 주장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속 복귀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18호 결의안 준수를 촉구함.
- 또 결의안은 “미국은 남북대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에 있어 한·미 간 강력한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은 양국이 그간 추구해온 전략적 목표에 대해 정치적 지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면서 “특히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미 의회 차원의 환영 의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함.
- 청와대는 또 “이번 결의안은 제111대 미 의회 개원 이후 채택된 한국 관련 최초의 결의안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 관계 발전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함. 이번 결의는 공화당 측에서 발의됐으나 이후 공화당 의원 17명, 민주당 14명 등 총 31명이 대거 공동제안자로 참여했으며, 이 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됨.

● 李대통령, 북핵 “5자 공동목소리 낼때”(6/16)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말함. 미국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블레어하우스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보상받고 다시 대화를 되풀이하는 과거 방식은 더이상 통용될 수 없으며,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배석한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함.
- 이는 최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발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무기화 등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현재의 6자 회담 틀과 방식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현실인식에 따라 북한



을 뺀 나머지 5개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됨.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도 “6자 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5개국이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할지 일치된 견해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이에 게이츠 장관도 “공감한다”면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처방안을 변경시킬 기회라고 본다”고 동의함.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련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나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함. 이에 대해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행위는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미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특히 “한·미 양국은 더욱 확고한 동맹 아래 방어역량 및 확장된 억지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전략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함.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이 보여준 단호한 모습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미국과 동맹국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기다리면 보상받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북한의 생각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함.
- 클린턴 장관도 “한·미·일 3국의 공조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의 이행과정에서도 관련국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북한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는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처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달초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언급,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수교하고 있어 과거에는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는 일제히 규탄했다”고 전함.
- 이밖에 클린턴 장관은 한·미 FTA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미 FTA가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의회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한치도 빈틈이 없다”면서 “중착점은 문제해결이지만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설득하는 국면”이라고 말함.



● 李대통령 “한·미FTA 조속비준 노력”(6/16)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블레어하우스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잇따라 접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및 글로벌 경제위기 공조방안 등을 논의함. 이 대통령은 먼저 커크 대표와의 접견에서 한·미 FTA에 언급, “경제적으로 양국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내에서의 역할 등 전략적 측면에서도 적지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관점으로 검토해 조속한 의회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배석한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함.
- 이에 커크 대표는 “한·미 FTA가 양국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동아시아에 미치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미 국민에게 한·미 FTA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약속한 것은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여러 현안이 있겠지만 한·미 FTA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미 FTA의 진전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함. 이 대통령은 이어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공조 방안을 협의함.
-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회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각국 정부가 세계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이에 가이트너 장관도 “런던 G20 정상회의를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졌고 세계 금융시장의 신뢰도 회복되고 있으며 미국도 금융, 주택, 개인저축 등에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경제회복에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초가 탄탄해졌다는 정도”라며 공감을 표시함.
- 이어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제회복 공조방안에)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함. 이에 가이트너 장관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동시에 세계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균형있는 회복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 또 이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다가 중단하면 경제회복의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으며, 가이트너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mistake)’”이라고 동의한 뒤 “미국 정부는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성장해서 재정계획을 세워 올해와 내년 감세 및 재정지출 규모가 거의 같다”면서 “한꺼번에 지출했다가 브



레이크를 잡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가이트너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잠재성장을 이하의 성장을 기록했고 그런 점에서 잉여생산에 못미치고 있다”고 진단함.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미국이 피츠버그 G20 정상 회의에서 세계 경제회복 공조에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가이트너 장관은 “한국이 이번 금융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함.

나. 한·중 관계

● 한국내 중국인 330명, 작년 사건사고 사망(6/21)

- 지난 한해 한국에서 비정상적인 이유로 사망한 중국인이 330명에 이른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음. 중국 외교부는 20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허잉(何穎) 참사관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게재해 “2008년 한국에서 비정상적인 이유로 사망한 중국인이 330명에 달한다”고 밝혔음. 여기서 비정상적인 이유란 각종 교통사고와 범죄사건 등 자연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됨.
- 허 참사관은 “한국에 오는 중국인이 급증하면서 중국인과 관련된 돌발 사건과 사고도 한꺼번에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국인과 관계된 사건·사고 건수는 지난 한해 2천건에, 연루된 인원수로는 3천명을 넘는다”고 말했음.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화교 2만명을 제외하더라도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사람만 58만명을 넘고 유학생도 5만명을 넘어섰음. 이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접수되는 영사보호 신청건수가 2만건을 넘고 1년에 처리하는 비자 신청건수가 업무일 기준으로 하루 1만건에 가까운 180만건에 달함.

다. 미·러 관계

● 美-러, 전략무기감축협상 23일 속개(6/18)

- 올 12월 시한 만료하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3차 협상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림. 안드레에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상 날짜를 23일로 정했다”면서 “이번엔 양국의 입장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무엇이 남아있는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는 또 “내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통상 등 양자 관계와 중동 문제 등을 포함한 국제 협력 분야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특히 “현재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 이뤄지는



양국 간 START-1 후속 협정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며 양국은 이번 만남에서 협상 잠정 결과를 발표한다는 전제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

- 로즈 고테필러 미 국무부 검증·군축 차관보와 아나톨리 안토노프 외무부 안보군축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국의 협상 대표단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1일 각각 두 차례 협상을 벌인 바 있음. 이번 협상들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은 3차 협상까지 마치고 1차 초안을 만든 다음 그 결과를 미-러 정상회담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양국은 지난 2002년 두 나라 정상이 서명한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서 핵무기 수를 1천700~2천200개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이보다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과 연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길에 이와 관련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주목됨.
- 미국은 체코와 폴란드에 미사일방어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인데 러시아는 자국 안보에 EOGKS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이 방어망이 이란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 총참모장은 지난 5일 미국이 MD 계획 추진 여부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밝히기 전에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START-1은 미국과 구소련이 냉전시대부터 계속해 온 군사증강의 무한경쟁에 '휴전'을 선언한 약속으로 아버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이 1991년 서명한 뒤 1994년 발효됐으며, 협정시한인 15년이 만료되는 올해 12월 5일 효력을 상실함. START-1은 양국 모두 6천 개의 핵탄두와 1천600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만을 보유하도록 함.

라. 기타

● <印, 中 미얀마 연료관 건설에 긴장>(6/17)

- 중국이 미얀마를 통과하는 대규모 가스 및 석유관 건설사업에 착수하면서 인도가 다시한번 상대적인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고 있음.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17일 중국 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CNPC)는 미얀마의 벵골만 해안지대인 키야우크류를 출발해 윈난(雲南)성 루이리(瑞麗)시까지 이어지는 석유 및 가스관 건설 사업을 오는 9월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총연장 1천100km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중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실어온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거치는 해상 운송로가 아닌 육로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됨. 연료 운송



거리 단축으로 엄청난 비용과 시간 절약이 예상된다.

- 미얀마 군정 2인자인 마웅 아예의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이번 프로젝트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남아시아 세력 구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즉, 그동안 파키스탄과 네팔,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이 미얀마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남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해온 인도를 다시한번 보기 좋게 누른 셈임. 특히 최근 미얀마는 지난해 12월 북서부 해상에 있는 A-1 광구의 쉐, 쉐퓨, 미야 등 3개의 가스전 운영권 경쟁에서 인도가 아닌 중국의 손을 들어줬고, 최근에는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도 중국에 맡긴 바 있음.
- 미얀마가 이처럼 친중국적 성향을 띠는 것은 다름 아닌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함. 소식통들은 “중국은 아마도 인권 탄압에 따른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경제 제재 등으로 부터 미얀마를 방어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말함.

● 韓, 파리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6/17)

- 우리나라가 이달 말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됐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힘. 한국은 이달 24~25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위기와 그 이후: 보다 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계경제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각료이사회에서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됨.
- 한승수 국무총리가 의장으로서 OECD 각료이사회를 주재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임. 우리 측은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보호주의 저지 등 시장개방을 통한 세계경제 회복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함. 한편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 발언과 관련, “재협상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미국에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소개함.

● 브릭스, 통화스왑-채권상호매입 추진(6/17)

- 중국, 러시아, 인도 및 브라질의 ‘브릭스’ 4국은 16일 첫 정상회담에서 ‘다극화된 국제 통화체제’의 필요성은 강조했으나 달러 위상 및 궁극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대신할 ‘슈퍼통화’ 문제는 일단 비켜가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함. 정상들은 이날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회동한 후 발표한 공동 코뮈니케에서 “국제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 금융기구들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신흥-개도권이 국제 금융기구들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함.
- 코뮈니케는 이어 금융 위기를 계기로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더 다극화된 국제 통화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임. 코



뮌헨에서는 그러나 브릭스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대 관심사였던 달러 위상과 슈퍼통화에 관한 언급이 전혀 포함되지 않음. 코뮌케도 회담 주최국인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나머지 3개국 정상들이 배석했으나 일체의 질문도 받지 않고 끝남.

- 로이터는 회담 소식통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채권을 궁극적으로 슈퍼통화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 등이 정상들 간에 논의되길 희망했으나 달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근 2조달러의 보유 외환을 가진 중국이 ‘달러 가치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전함.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도 17일 ‘브릭스가 국제 통화체제의 다극화를 촉구했다’는 제목으로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면서 정상들이 ‘명백하게 달러를 비판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고 강조함.
- 저널은 코뮌케도 달러를 대체할 새 기축 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러시아가 정상회담 직전 ‘슈퍼통화는 (정상회담과) 별개 사안’이란 점을 부각시킨 점을 상기시킴. 저널은 세계 최대 미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자승자박을 우려해 달러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블룸버그는 그러나 회담 소식통들을 인용해 브릭스 4국이 달러 의존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서로 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전함. 또 4국간 통화 스왑도 추진되는 것으로 덧붙임.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브릭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에게 보유통화 다각화 방안을 추진하라는 숙제가 주어졌다고 전함.
- 한편 중국 외교부는 16일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채 매입에 대해 질문받자 “중국이 안보와 유동성, 그리고 가치 보존이란 점을 감안해 미국채를 매입해왔다”고만 대답함. 그러나 지난 4월 1년여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미국채 보유가 줄어든 것으로 미 재무부가 집계한 점에는 논평하지 않음.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인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도 이날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달러 비중을 줄이기 위해 중국, 인도 및 브라질과 호혜 조건으로 서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中·印 긴장고조로 합동훈련 취소”(6/15)

- 중국과 인도가 국경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던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한 것으로 15일 알려짐. 베이징의 군사소식통은 이날 “중국과 인도가 연말에 열릴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했다”면서 “현재 국경지역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 주된 원인”이라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양국이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모두 합동훈련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연례군사훈련의 향후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임을 시사함. 최근 양국 사이에는 국경지대를 둘러싸고 갈



등이 고조되고 있음.

-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에서 가까운 북부 아삼주(州)의 테즈푸르 공군기지에 러시아산 수호이-30 MKI 4대로 구성된 비행 편대를 배치했음. 이 공군기지는 중국과 국경을 맞댄 아루나찰 프라데시를 폭격 사정권에 둔 곳임. 인도는 또 북동부 국경지대에는 5개의 비행장을 포함한 다양한 공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인도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에 병력 6만명을 증원하고 화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인도가 담당하고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는 중국이 인도가 이 지역의 90만km²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는 지역임. 국경분쟁으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던 중국과 인도는 지난해 1월 만모한 싱 총리의 방중을 전후해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짐. 이에 따라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2007년과 지난해 연말 등 2회에 걸쳐 훈련을 시행한 바 있음. 한편 중국은 최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도와의 갈등과 관련, “대화와 협상으로 국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인도의 병력 증파 현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참고 1] <역대 한미 정상회담 일지> (연합뉴스, 6/16)

(워싱턴=연합뉴스) 추승호 이승관 기자 = 한·미 양국은 우리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상대국이나 제3국에서 모두 51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갖고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1960년대에는 6번의 회담이 있었으나 유신체제이던 1970년대에는 단 두차례 뿐이었고, 그나마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이뤄진 회담은 없어 당시 양국 관계를 짐작케 한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는 15차례로 급증해 한국의 민주화와 세계화 추세가 한·미정상회담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기간 매년 1-3회씩 무려 10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1993년부터는 상호방문 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정상회담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모두 8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좌가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7월 일본 도야코(洞爺湖), 8월 청와대, 11월 페루 리마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4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올들어 4월 영국 런던에 이어 이번 백악관 정상회담까지 15개월만에 무려 6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전례없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다음은 역대 한·미정상회담 일지.

- ▲1952.12.2-12.5 =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 방한,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
- ▲ 54. 7.30 = 이 대통령 방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
- ▲ 60. 6.20 = 아이젠하워 대통령 방한, 허정 국무총리 면담
- ▲ 61.11.14 = 박정희 국가재건회의 의장 방미,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
- ▲ 65. 5.18 = 박 대통령 방미, 존슨 대통령과 회담
- ▲ 66.11. 2 = 존슨 대통령 방한, 박 대통령과 회담
- ▲ 68. 4.17 = 박 대통령 방미, 존슨 대통령과 회담(호놀룰루)
- ▲ 69. 8.22 = 박 대통령 방미, 닉슨 대통령과 회담(샌프란시스코)
- ▲ 74.11.22 = 포드 대통령 방한, 박 대통령과 회담
- ▲ 79. 7. 1 = 카터 대통령 방한, 박 대통령과 회담
- ▲ 81. 2. 2 = 전두환 대통령 방미,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
- ▲ 83.11.14 = 레이건 대통령 방한, 전 대통령과 회담
- ▲ 85. 4.26 = 전 대통령 방미,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
- ▲ 88.10.20 = 노태우 대통령 방미,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
- ▲ 89. 2.27 = 아버지 부시 대통령 방한, 노 대통령과 회담
- ▲ 89.10.17 = 노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과 회담
- ▲ 90. 6. 6 = 노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과 회담



- ▲ 91. 7. 2 = 노 대통령 국민 방미, 부시 대통령과 회담
- ▲ 91. 9.23 = 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부시 대통령과 회담 (뉴욕)
- ▲ 92. 1. 6 = 부시 대통령 방한, 노 대통령과 회담
- ▲ 93. 7.10 = 클린턴 대통령 방한,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
- ▲ 93.11.23 = 김 대통령 시애틀 APEC 정상회담후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워싱턴)
- ▲ 94.11.14 = 보고르(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정상 회담
- ▲ 95. 7.27 = 김 대통령 방미,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 ▲ 96.11.24 = 마닐라(필리핀)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정상회담
- ▲ 96. 4.16 = 클린턴 대통령 방한(제주도), 김 대통령과 회담
- ▲ 97. 6.27 = 김 대통령 유엔환경특별총회(뉴욕) 참석중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 ▲ 97.11.24 = 밴쿠버(캐나다)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정상회담
- ▲ 98. 6. 9 = 김대중 대통령 국민 방미,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 ▲ 98.11.21 = 클린턴 대통령 방한, 김 대통령과 회담
- ▲ 99. 7. 2 = 김 대통령 방미,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 ▲2000. 6. 9 = 김 대통령, 오부치 전 일본총리 장례식때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 ▲2000. 9. 7 = 김 대통령, 천년정상회의(뉴욕) 계기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 ▲2000.11.15 = 브루나이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정상회담
- ▲2001. 3. 7 = 김 대통령 방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회담
- ▲2001.10.19 = 상하이(중국)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정상회담
- ▲2002. 2.20 = 부시 대통령 방한, 김 대통령과 회담
- ▲2002.10.27 = 로스 카보스(멕시코)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 ▲2003. 5.15 = 노무현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
- ▲2003.10.20 = 태국 방콕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
- ▲2004.11.20 = 칠레 산티아고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
- ▲2005. 6.11 = 노 대통령 방미, 백악관 정상회담
- ▲2005.11.17 = 부산 APEC 계기 경북 경주 정상회담
- ▲2006. 9.14 = 노 대통령 방미, 백악관 정상회담
- ▲2006.11.18 = 베트남 하노이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
- ▲2007. 9. 7 = 호주 시드니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
- ▲2008. 4.19 = 이명박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과 캠프데이비드 정상 회담
- ▲2008. 7. 9 = 일본 도야코(洞爺湖)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 ▲2008. 8. 6 = 부시 대통령 방한, 이 대통령과 회담



- ▲2008.11.22 =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 ▲2009. 4. 2 = 이 대통령, G20 런던 금융정상회의 계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 ▲2009. 6.16 = 이 대통령 방미,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

chu@yna.co.kr
human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6/12/0503000000AKR20090612199000001.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